

[대선토론전문]민중참여경선제 어디로 가나

8 민주노총 | 0 승인 2007.06.07 18:10

“2007 민주노동당 대선, ‘민중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토론회 ‘민중참여경선제 둘러싸고 찬반양론 불꽃공방’

=지난 5월29일 민주노동당 주간신문 진보정치와 월간지 이론과실천 편집국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놓고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이 앞서 제안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 성원들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출권을 부여하자는 방안 등에 대해 불꽃공방이 펼쳐졌다.

민중참여경선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당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의 불가론과 당 정체성 훼손론, 진성당원 훼손론 등을 앞세웠고 찬성 쪽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자들 참여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지지계층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1차 토론회 이후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 등에는 찬반 의견이 속속 게재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앞서 대선출마 뜻을 밝힌 민주노동당 후보들 입장도 팽팽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심상성, 노희찬 국회의원 등이 대선출마 뜻을 공개했고, 이들 중 심상성+노희찬 의원이 민중참여경선제안에 반대를, 권영길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4일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남원에서 만나 “민주노총 중집이 결정한 합의정신을 토대로 ‘민중참여경선제방안’에 대한 긍정적 고려를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성현 대표가 “당 최고위가 관련 방안 재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정사항을 통고해 “더 이상의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최고위의 재의불가 결정을 접한 민주노동당 일부 중앙위원들은 즉각 민중참여경선제를 당 중앙위가 다루도록 현장발의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민중참여경선제 안건이 취급될 예정이다.

올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화두에 눈길이 쏠려 있다.

[관련기사]

한편, 2차 대선토론회가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7일 오후 2시부터 120분동안 열렸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반대입장보다는 찬성입장과 함께 선거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진보정당의 대선 및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현실적 결합방안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선거대책위 구성, 시군구 지역에 기반한 정치네트워크 구축, 기층 중심의 선거시기 현안 의제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서로 제안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2차 대선토론회 전문이다.

[표시작]

토론회 참가자=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박석운 진보연대(준) 상임위원장,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토론주제=▲대중단체별 대선투쟁 정치․조직․독표 목표 ▲대선승리를 위한 역량편성 방안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바른 결합방도

[표끝]

■민주노동당 2차 대선토론회 전문

▷신석진/사회자(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오늘 토론은 발제문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간다. 실제로 발제를 하고 평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론 취지는 나뉘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민주노총이 제안한

민중참여경선제가 오는 16일 당 중앙위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뜨거운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타적 지지계층들의)참여방식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의견을 제출했다. 당내 대선후보인 권영길 의원도 100만 민중 참여와 11월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선거전이 돼야 한다며 민중참여경선제 방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내놨다. 당내외 논의를 촉발시켰다. 당내에서 벌어지는 활발한 논의와 함께 민주노동당 기관지가 이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주제는 먼저 첫째, 대중단체별 대선투쟁 정치․조직․득표 목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둘째 주제인 대선승리를 위한 역량편성 방안을, 마지막으로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바른 결합방도 등이다. 첫째 토의주제를 갖고 당-노-농-진보연대 순으로 발언한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민주노동당이 대선투쟁에서의 실제 정치적, 조직적 득표 목표에 대해 16일 중앙위에서 전반적으로 공유할 것 같다. 정치적 목표 핵심은 당이 대한민국 진보민중진영의 총집결, 총단결을 실현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가 있다. 이걸 위해 집권정당으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대선이후 총선에서 원내교섭 단체 확보 실현에 있다. 더 나아가 제1야당 위상 확립도 필요하다. 정치목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진보민중진영을 단결시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다. 8만 당원을 넘어서는 시기에 당원확보를 통한 15만 당원시대를 열고, 한국진보연대를 통해 진보진영을 폭넓게 크게 강화 단결시키며, 진보민중진영 총단결과 정책단합을 위한 대규모 연대강화에 조직목표가 있다. 득표목표는 300만표 득표, 총선 30석 확보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 있어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총체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것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그러려면 당 강화와 승리가 민중고통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과거에도 당 선거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왔다. 현재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만 선거에 임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떻게 단일대오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 실제 지지투표율에 있어서 최소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이 당을 지지하고 선거에 함께 투쟁한다는 방안을 구상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 친척 등도 적극 참여토록 하면서 민주노동당 대선․총선투쟁에 상당부분 기여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과거에도 200만표 득표를 목적했었다. 현재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 중 80% 지지율 등을 계산하면 민주노동당에게 250만표 이상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대선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전농 홈페이지에서도 대선 후보 선출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농 상집에서 대선방침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전농)중앙위에서 확정된다. 03년도 농민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첫째 대선공간 속에서 농민들의 정치영향력을 확대강화하고, 둘째, 대선투쟁 통해 신자유주의와 한미에프티에이를 박살내 민주노동당 강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으로부터 “전농 대안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는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희망과 대안을 갖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미에프티에이 투쟁 결과를 보면서 의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명박과 견주는 정도의 지지도가 나타났다. 또 하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18.5%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 평균 지지율은 5%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의미있는 지지율이다. 또 투쟁과 결부될 때만이 당에 대한 농민 지지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대선투쟁에 총력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직목표는 의미 있는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의미 있는 당선자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4년째인데 지금은 정체돼 있다. 농민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율은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대선공간 속에서 농민가입을 늘려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2007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준) 상임집행위원장=올해 대선투쟁, 총선투쟁 목표는 진보민중진영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입하는 게 총체적 목표가 돼야 한다. 현재 대선판을 보면 보수궐통들이 각 축전을 벌이는 반면에 진보진영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일정정도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쟁으로 돌파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입할 것이냐가 투쟁목표가 돼야 한다.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한반도평화체제 확립 등의 의제와 함께 집회시위자유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 구축 방안을 포함한 민중의제를 대선의제화 시켜야 한다. 이게 정치적 목표다. 두 번째, 조직목표는 진보민중의제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지역에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그것이 지역적 시군구 진보연대와 기층조직인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여성, 한청 등과 같은 대중조직이 결집해 한국진보연대 본조직 출범이라는 조직태세로 나타날 것이다. 진보민중진영이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 없이 (선거승리를)외치는 것은 잠꼬대만 하는 낭만적인 자들이다. 조직적 태세를 만들고 조직과 투쟁의 변증법적 통합이 중요하다. 득표 운동은 당이 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민중진보진영은 득표보다는 투쟁목표에 집중한다.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가는 과정에서 민중진보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투쟁한다. 개인투쟁을 넘어 민중진보진영의 정치적 목표로 한 단계 전진시키기 위해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대중투쟁 목표다.

>사회자=목표설정 관련해 조직별 논의는 모두 다르다. 목표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묻는다. 어떻게 250만표를 모을지 궁금하다.

>박석운=당이 300만표를 모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250만표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당위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용식=민주노총 얘기가 당위와 희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제시한 근거가 있다. 04년 4.15총선 당시 저는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 75%가 민주노동당을 찍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2 대선이 끝난 다음에 또 조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35%가 당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찍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정치적 승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1단계로 2004년 4.15 총선에서 70% 이상 지지율 확보라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1인3표를 조직해 200만표를 조직했다. 현재 250만표 전후한 지지표 확보와 관련해 최근 모 언론매체가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97%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그중 70%가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조금 욕심을 더해 10%만 더 조직해 대선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중 80%가 민주노동당을 찍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합원 64만명이 3인 또는 4인씩 조직을 해낸다면 250만표가 실제로 가능하다. 민중참여경선제를 끈질기게, 현장요구로 제시하는 이유도, 이 점을 제안하는 이유가 단순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기환=득표율 관련해 박석운 소장도 대선공간에서 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승리가)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저희도(전농도) 마찬가지다. 한미에프티에이 투쟁결과가 보수적인 농촌지역에서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높였다. 투쟁과정을 통해 대선을 돌파하는 방안은 이후 말하겠다.

사회자=목표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린다. 지금 한나라당 대선후보자인 박근혜와 이명박씨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주장한다. 범여권 진영 대통합 흐름이 아직 전개 중이라 그렇지 선거막바지에 이르면 태풍의 눈처럼 피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상식화되고 있다. 때문에 300만표 득표라는 목표조차 부족해 보인다.

이용식=02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100만표 조금 부족하게 득표했다. 선거 막판에 정몽준 씨가 노무현 후보와 연합을 맺고 이에 따라 선거패배라는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쏠려있던 표 중 50만표가 노 후보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제 아이도 노 후보를 찍었다고 하기에 처음으로 아이 먹살을 잡았다.(일동 웃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권영길 후보가 150만표 정도를 획득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내부분란이 아니라 한목소리를 낸다면 당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활동 속에서 확신한다.

박석운=저는 아까 질문한 이유가 민주노총이 총장말씀처럼 250만표를 받는다 치자. 도대체 그 수치는 몇 등을 말하는가. 그래봐야 마이너리그일 뿐이다. 메이저리그로 가려는 투쟁이 없다. 조직 활동은 3등, 투쟁은 1등을 목표로 삼는 과감한 목표와 방식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갑갑한 점은 민주노동당의 세명 후보자들이나 당과 총연맹 지도부와 핵심골간 활동가들이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상태를 보면 4등 수준이다. 끝에 가서 텔레비전 토론 좀 잘하고 공약 좀 잘 낸다고 판이 바뀌나? 전형적인 예가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종철 후보 상황을 보라. 텔레비전 토론회도 잘 했고 이미지와 공약도 좋았지만 당 지지율보다 낮은 3.5% 득표를 했다. 그 당시 민주당이 작은 승부를 띄워 일약 8% 득표로 올라갔다. 민주노동당이 보수적인 선거전술을 쓰고 있다. 판을 뒤집으려는 투지가 없다. 손따라 가는 판짜기에 불과하다. 현재 당 지지율도 못 찾아 먹는다. 어떻게 대중투쟁을 통해 1등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선동=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박석운 소장 의견에 찬성한다. 선거는 부르주아 정치를 합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민중 욕구가 폭발 분출하는 계기도 된다. 역사 속의 민중항쟁들이 선거 시기에 폭발했다. 이번 시기에도 민중들 요구는 분출될 것이다. 민중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대중투쟁과 함께 가야한다.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 속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이 집권하고 사회경제체제를 민중이 주인되는 체제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민중역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직역량을 성과로 남겨야 한다. 한국진보연대가 구축되고 확대 강화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실현될 때 당이 집권정당으로 도약할 것이다. 주체적 의지 표현만으로 목표가 설정될 수는 없다. 당이 집권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출마한 사람이다. 노희찬 의원께서는 대선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셨다. 권영길 의원께서도 진보대연합을 실현시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섰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다. (민주노동당이)현실적 계획과 방도를 정확히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그 점을 (패널들께서)지적하는 것 같다. 주관적 주체적 의지를 현실화시키는 계획과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중앙위 쟁점이 될 것이다. 현실 정치판을 최대한 흔들어 유동적으로 만들어 변화를 일궈나가는 것이 기초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영내부에서 몇 프로 성과에 안주하거나 그 안에 갇혀 있는 시각을 벗어나 전적으로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판을 흔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 투쟁 방안을 짜야 한다.

사회자=당내 3자 구도 정립, 메이저리그 진입론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두 번째는 대선승리를 위한 역량편성이라는 주제다. 전쟁을 치르려면 내부 진용을 잘 갖춰야 한다.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한 100만명 결집론, 진보대연합론 등은 진용을 갖춘 역량편성 문제이다. 소주제 범위가 큰데 초점을 우리측 역량편성에 맞춰 토론을 진행한다.

>박석운=저는 이 부분을 요약해 집토끼론을 말씀드립니다. 집토끼는 크게 두 부류다. 조직된 집토끼와 미조직된 집토끼다. 지금, 조직된 집토끼만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이 조직된 집토끼도 제대로 안 챙기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핵심은 미조직 집토끼를 챙겨야 한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청년학생, 여성, 노동자 등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한다. 대대적이고 실리적인 정치사회 의식화 교육도 시켜야 한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께서 70%, 90% 지지율 목표를 말씀하시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여전히 튼튼하지 못하다.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1회원 1조합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촘촘한 체계적 구성이 필요하다. 시군구 차원에서 대대적인 가두교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두강좌 회원을 모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조직 집토끼들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시군구차원에서 다층적, 중층적으로 펼쳐야 한다. 시군구 진보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당원까지 포함해 미조직 노동자들, 영세사업자들까지 기초조직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네트워크 명칭이 한국진보연대든, 한미에프티에이저지운동본부든,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다. 보편적으로 한국진보연대라는 명칭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씨줄날줄로 엮어야 한다. 이걸 하지 않고는 (대선․총선투쟁 승리를)꿈꾸지도 말라. 지역현안이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보편적 과제를 갖고 일상 정치활동도 해야 한다. 지역토호와 기득권집단 네트워크를 무너뜨려나가는 진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가을까지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거 안 하고는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진보민중진영 의제를 밑에서부터 결집하고 위로 올려야 한다. 11월 중순 대규모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작년 11월22일 투쟁보다 더 강도 높고 규모가 큰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 정치전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선후보자들에게 받을 것을 압박해야 한다.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진보대연합이라는 실제 가능성이 생긴다. 진보민중진영이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일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리그 구성원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깡죽거리는 꼴이다. (이런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면)민주노동당은 흡수 합병 될 것이다.

>전기환=저희도 이번에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결합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우리식으로 단결시키고 주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미래가 멋있다고 해도 현실적 고민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찌든 민중을 투쟁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투쟁의 힘으로 대선투쟁을 한다면 필승이다. 대중은 어느 날 갑자기 모이지 않는다. 박석운 소장께서 그 기점에 대해 11월을 말씀하셨다. 전농이 11월 대선투쟁을 통해 민중전선을 결집시켜 의미있는 투쟁을 한다면 집권대연합도 가능하다. 11월 50만 투쟁을 통해 대선을 돌파하자고 하면서, 50만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문제다. 전농은 회원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데 3만 회원이 330만 농민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전농이 100개 시군을 조직했다. 100개 시군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민이익을 대변할 대선후보가 누구인가를 설명한다. 전망을 간담회를 통해 논으며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조직하고 실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1인1실천사업을 벌이면서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병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11월 50만이 집결해 더도말고 1주일만 투쟁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진보진영 단결을 통해 판을 흔든 다음에 12월 대선을 맞는다면 250만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11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진영을 하나로 결집해 내느냐가 대선투쟁 승리 관건이다.

>이용식=대선투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6월부터 12월까지 하나로 관통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대선후보는 진성당원만 뽑고 대선투쟁은 함께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11월 민중총궐기를 지도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대선후보들이다. 민중과 함께 후보를 만들고 투쟁전선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개 문제가 아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큰 바다로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강점이 있다. 하나같이 얼마나 순결하고 투명하고 사상적 확신 속에서 오늘날까지 싸워왔는가. 이 힘을 갖고 대중을 안고 나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당이 안고 갈 수 있도록 열어야 한다. 당은 계속지지 세력을 확대해야 한다. 금년 말 대선승리를 위해 민중과 함께 준비하고 투쟁하며 승리하는,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관통된 사업을 해야 한다.

>김선동=노무현 대통령이 자기정부를 일컬어 참여정부라 해놓고 철저히 민중참여를 배제시켰다. 민중들이 자기를 찍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중배제를 염두에 두고 자기정부 성격을 포장하는 등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민중정치세력화를 사명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이 맞는 대선총선 시기에 당은 민중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화두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는 당의 영원한 숙제이고 중심적 고민과제이다. 각급 대중조직들도 이 점에 대해 깊이 있고 철학이 담긴 사상 관점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진보연대에 대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 민주노동당이자 진보연대이다. 진보연대에서 당 주도성과 중심성이 중요하다. 주도성은 당 몫이지만 다만 진보연대 차원의 당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중참여경선제를 둘러싸고 당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진보연대가 진보민중진영 총궐집 정신을 주창하면서도 발을 빼고 있는 것을 본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런 논의를 계기로 명실상부하고 실질적인 진보민중진영의 공동선거대책본가 이번 대선에서는 꼭 꾸려졌으면 좋겠다. 작년 지방선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서두라고 간주했다. 당시 힘 있게 함께 단결해 싸우지 못했다. 공동선대본도 꾸리지 못했다. 진보연대가 중심이 돼 당을 중심으로 한 대선․총선 공동선거대책본부를 실속있게 꾸릴 것을 호소드린다. 각급 대중조직들의 사회정치적의식을 고양시키는 쪽에 필요하다.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잘 준비돼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일대 전기가 마련 되기를 바란다.

>사회자=진보연대가 참여하는 공동선대본 구성 제안과 함께 당이 어려움에 있을 때 발을 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박석운=아직 (진보연대는)본조직이 구성되지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는)의견을 모아 지도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께서 도발하셨기 때문에(일동 웃음)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 올해 35년째 운동하고 있다. 소위 '짚밥'이라는 게 있다. 수많은 선거판을 경험했다. 경험과 나름대로의 대중투쟁 진행과 사회변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용어부터 바뀌어야 한다. "판을 흔들자"가 아니라 "판을 바꿔야 한다"라고. 조직과 투쟁은 같이 가야 한다. 현재 우리는 조직에 대해 미진한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판을 바꿀 때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론이 그것이다. 당은 당 지역위를 설립해 강화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견 관념론자의 무지한 주장이다. (일반 대중들은)정당에 대한 기피증이 있다. 특히 진보정당에 대한 기피증이 이중적으로 심겨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생경하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큰 판을 만들기 위한 투쟁과 사업전선을 만들려는 노력, 당을 강화하려는 노력 등 양수검장이 필요하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둔한 운동이다. 시군구에서 명칭이야 어쨌든 당을 안쪽 동심으로 하고 그 주변을 넓히는 2-3단계 동심원을 구축하고 각각을 강화하는 조직전술이 필요하다. 대중적 실천 매개체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다. 둘째는 민중참여경선제를 유력한 매개로 생각한다. 셋째는 대대적인 정치사회 의식화교육이다.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 조직된 집토끼와 미조직된 집토끼를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안이더라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당과 진영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벌여야 한다. 미조직된 집토끼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재 당이 민주노동당으로 잘못 인식돼 있다. 이런 이미지가 국민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이 대기업위주 정규직 노조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먹혀들어가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민중참여경선제에 대대적으로 조직하자는 방안을 낸다. 가두선전, 인터넷, 대중매체 통한 광고 등을 하자. 그 부분을 정치교양화 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벌이자. 비정규 노동자 5만명이 경선에 참여하면 500만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이고 대기업정규직 노조라는 이미지를 극복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깰 수 있다. 미조직 집토끼를 참여시키는 부분,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당 승리 발판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2-300만표는 황당하다.

>사회자=대선후보자와 3자 연쇄 인터뷰를 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당이 되어 한다는 주장을 심상정 후보가 말한다. 거꾸로 민중참여경선제라는 방식이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킨다는 주장도 한다.

>박석운=때문에 (비정규 조직을)더욱 조직화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그 점에서 제 논리는 심 후보 견해를 흡수통합하고 있다.

>사회자=내부진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민중참여경선제 주창은 100만참여경선제라는 한 몸통에서 시작된 것이다. 동심원의 실제 내부에 약간 차이가 있다. 동심원 벽들은 어떤 동심원이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보충 설명을 해 달라.

>이용식=지금 고민할 지점은 당 지지율이 10%전후에만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낮을 때는 5%에 불과하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갖고 대선에 임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지지자 성향을 분석해보면 망치를 든 사람과 팬대를 든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팬이 망치보다 지지율 다수를 차지한다. 소득도 1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 노동자보다 200만원 이상의 대졸급들이 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당이 지지를 넓히고 판을 갈려면 구성원 성향을 바꿔내야 한다. 바로 더 많은 망치든 자들이 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호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단순한 투표방식이 아니라 당이 누구와 함께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기초,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당이 정말 지지를 높이고 세상을 바꾸려면 구성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민중참여경선제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민중참여경선제를 민중배제경선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거꾸로 뒤집히더라.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비정규직을 안겠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그건 비정규직이라는 성향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10년을 투자해도 비정규직 모습이 조금 보일까말까하는 정도다. 비정규직 참여하고 찍으라고 해서 조직이 되는가? 정말 당이 가진 관점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비정규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된 민주노동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당이 민주노동당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당이 더 넓어지기 위해 안고 가야 하는데 지금 민주노동당 모습에 동의할 수 없다. 노동조합, 노동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새로 조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특히 노동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치는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공동선대본부도 당이 어떻게 민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권력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확증하지 않는 한 공동선대본 구성도 어려울 것이다. 당은 자기 틀을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전기환=선거 때만 되면 (민주노동당과)공조해왔다 특히 전농같은 경우 일선에서 득표활동을 해왔다. 04년 4.15선거와 06년 5.18 지자체 선거를 통해 농민을 모으는 전술에 대해 경험해봤다.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 다소 난처하다. 오늘 모이신 패널들을 일상 속에서 자주 뵙지만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다. 박석운 소장께서 민중경선제가 중요한 전략이라면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논의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변질된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농은 3월 개방형경선제를 논의했다. 당이 노동자 농민 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대에서 부결됐다. 전농은 4월15일부터 5월까지 전국순회를 했다. 전농 현장대장정이 끝나고 보니까 민중참여경선제를 둘러싼 논쟁이 심상치 않아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하나는 민중경선제 플러스알파가 돼야 한다. 좀 더 단결되고 통일돼 힘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혼란을 가져온다면 안 된다. 따라서 단결을 전제해야 한다. 문제는 전농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공동선대본과 공동투쟁, 공동정책생산을 통해서 330만 농민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단체들이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이 방안이 유효한 토론이 되길 바란다.

이용식=개인적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주노동당 참여문제와 관련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중참여경선제가 실행되면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하면 된다. 누구든 비정규직임이 입증되면 투표권을 주면된다. 한달동안 대대적으로 광고하자. 어려움은 없다. 당이 정말 민중과 함께 판을 흔들겠다는 결심만 서면 된다. 마음을 열면 방법이 있다.

박석운=좋은 말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세 그룹이 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말씀처럼 현장의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등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안은 좋은 방안이다. 민주노총 조합이 결성되지 않는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들도 조직해야 한다. 현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함께 지역차원의 가두모집과 참여방식을 적극 모색하자.

김선동=박석운 소장 발언이 민중참여경선제에 포괄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발언처럼 오늘 토론회가 민중진보진영 집행책임자 토론이기 때문에 공동선대본을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한다. 빠른 시일이라 함은 9월15일 후보선출 시점을 전후해 민중진보진영 공동선거대책본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책임자가 함께한다는 점을 합의하고 결의되면 좋겠다. 공선본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려면 민중참여경선제가 공동선대본을 내용적, 형식적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틀이라는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주장에 공감한다. 민중참여경선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 집행책임자 동지들이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이 아쉬워하는 대목에 대해 박석운 소장께 “진보연대가 책임있게 함께 논의하는 점이 부족했다”는 점을 (토론회에)앞서 상의했다. 내부역량 문제에 대해 박석운 소장께서는 시군구지역에 진보연대 네트워크 구축론을 강조했다. 이것을 초기부터 논의해야 한다. 당도 234개 시군구에 대선총선을 거쳐 지역위 건설 등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220곳이 준비되고 있다. 지역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주도성을 갖지 못한 지역도 있다. 냉엄한 현실을 볼 때 이런 한계를 뚫고 영세사업 노동자 등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고민이 집중된다면 접목점이 나올 것이다.

박석운=지역차원, 조직부문 차원 민중참여경선 등을 주장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중요한 점은 한미에프티에이 문제가 진보진영 내외연을 가장 넓게 확장했다는 사실이다. 농촌과 서민들이 직접 피해를 받는데 여기에 광우병 쇠고기같은 식량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폭넓은 문제다. 매우 쉽지 않는 일이지만 전농과 에프티에이 농대위가 주장하는 대대적인 찬반 민중투표를 해야 한다. 사실 주동성이 떨어지는데 “직접 민중투표를 실시하자”는 농대위 안은, 농촌에서는 가능한데 도시지역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올 가을에 가서는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요구를 결집시키기 위한 투표방안도 있다. 우리 정치요구를 놓고 투표를 통해, 민중참여형, 대중참여형 의제를 확장시키는 방안도 참여방안이다. 모두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각 방안에 대해 분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동선대본은 그 다음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선거대책본부는 하위개념으로 본다. 공동투쟁본부로 가야 한다.

사회자=토론회 기본취지는 민중참여 문제이다. 구체적 경로와 방법을 갖고 토론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게 묻는다. 단순히 진보진영의 공동선대본이라면 의미가 떨어지는데.

김선동=당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공식선대본이 구성될 것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공동선대본도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선거를 보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수준에 머물렀다. 실질적으로 선거투쟁을 대중투쟁으로 병행,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민중경선제가 실시된다면 사전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공선본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지휘본부를 당과 함께 진보민중진영이 함께 꾸려가자는 취지이다. 박석운 소장께서 민중투표를 주장하셨다. 의제설정을 위한 민중참여방안으로써 투표형식도 있지만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도 가능한데 꼭 투표로 조직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공약, 정책, 의제도 결국은 실현하려는 노력과 후보선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희석해서는 안 된다.

박석운=(민주노동당 대선)후보선출에 민중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만 갖고는 약하다. 여론조사만 갖고는 민중이 주체로 서기에 한계가 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민중투표제가 검토돼야 한다. 참여,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민중투표, 정치요구를 결집시키는 민중참여를 중층적으로 조직해내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판을 바꾸는데 미흡하다.

사회자=그런 수단에 대해 구체적 실행경로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께서 제안하셨는데 패널들께서는 다른 제안은 없으신가?

이용식=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에게 제안 드린다. 노농이 함께 이 문제(민중참여경선제 실현)에 대해 당이 수용하도록 공동안을 내면 어떤가?

>전기환=내부 공유 문제 등이 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나 얘기하자.

>사회자=세 번째 주제로 넘어간다.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 없이 논쟁했다. 당시 실제상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내고 독자선거 전술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에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하는 자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께서 올 11월 100만 민중총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전기환=작년 11월22일을 기억한다. 당시 대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토론이 있었다. 11월22일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직은 잘 했는데 투쟁에서는 졌다. 투쟁을 제대로 하려면 의식화해서 조직하고 실천토록 해야 한다. 말로만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자는 것이다. 미리 실천을 결정하고 그 틀에서 대중을 조직해 11월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12월 승리하자는 기제를 (전농은)갖고 있다. 제안 드린다. 하나는 11월 투쟁방안을 미리 결정하자는 것이다. 광범위한 민중들이 조직된 투쟁을 만들자. 스스로 결의하고 참여하도록 대중교육이 필요하다. 전농, 빈민, 학생, 민주노총, 당 등이 자기 스스로 교육하고 11월 투쟁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 두 번째는 결정된 내용을 갖고 전체 회원 교육을 실행하자. 전농은 330만 농민을, 민주노총도 80만 조합원을 교육하는 실천계획을 내놔야 한다. 7-9월에 걸쳐 실천하자. 9월 중 실질적으로 진영에서 실천 과정을 겪어보자. 9월 중간점검을 통해 11월 대중투쟁을 만들자. 전농은 농산물출하 거부, 쌀 야적 투쟁, 농기계 도로거치 투쟁 등을 고민하면서 농민 10%이상이 참여하는 투쟁참여 방안을 만들고 있다. 10%가 의미있는 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말로만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통해 당을 짚게 하자는 안이다.

>이용식=민주노동당은 9월중순 대선후보 확정계획을 갖고 있다. 민중참여경선제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장 조직 1만여 곳을 움직일 수 있다. 당 진성당원 5만명이 이미 후보를 결정했을 것이다. 진성당원에 대해 지지와 홍보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선거기간 내내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있는 곳에 가서 11월 투쟁을 설명하고 의지를 모아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진보대연합이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1월 힘있게 투쟁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6월29일 금속 15만, 보건의료 노조 5만명 등이 총파업을 벌인다. 나머지 조직들도 투쟁계획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 6.29일 30만명 정도가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생사를 건 투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힘있게 방식과 내용을 선택하고 가야 한다. 민중참여경선제는 민중요구를 구현하는 가장 주요한 방식이다.

>김선동=의제를 위한 민중투표보다는 11월 민중총궐기를 위해 민중을 끌어내는 방안이 함께 진행된다면 더 위력적일 것이다.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찬반 민중투표와 11월투쟁에 임하는 조직들과 함께 가야 한다. 민중참여경선제가 실시된다면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함께 가는 전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사회자=11월 민중총궐기에 대해 동의하는 것 같다. 바로 청중들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질문=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게 질문 드린다.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민주노총이 제안한 민중참여경선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김선동="중앙위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 같나"는 질의에 대해 7월 임시대대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결될 경우 논의는 종결된다고 본다. 더 이상 논의는 시의성을 상실할 것이기도 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대선전반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7월초중순 민주노동당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이 가능하다. 이 시점을 놓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부결될 경우 추후 수순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민중참여경선제가 부결될 경우 이후 민주노총 방안은?

>이용식=조직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가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논의할 때 당과 합의 추진한다고 했지만 안 될 경우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정신도 담겨있다. 민주노총 중집결의는 민주노동당이 민중참여경선제를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는 정신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그 안이 부결될 경우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한 더 이상의 조직적 토론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은 즉각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질문/민주노총 오동진 정치국장=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게 묻는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당 중앙위가 인정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이다. 그렇다면 승인된 조직을 주체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당 계획과 방침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이 부분에 대해 지침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노동자 민중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당을 지지하고 복무하기로 판단해 당에 요청을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은 거꾸로 흘러가는 경우이다. 이런 방침(민중참여경선제 등을 중심에 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안 등)을 두고 당이 지침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민주노총은 황당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세력은 민중참여경선제에 대한 논쟁을 주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마치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16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에게 전체 조합원과 회원의 대선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46315;을 주인주체로 세울 수 있는 지침은 무엇인가?

>김선동=지침을 만들기 위해 당에 노동위원회, 농민위원회 등이 있는데 지침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전농은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인정한 지지조직일 뿐만 아니라 당현상 할당조직이다. 노동부문, 농민부문 최고위원 부문할당 등이 그런 것이다. 당현상으로 인정된 대중조직이다. 민주노동당 중앙위 인준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관련해 하기 싫어해도 당이 자기 기반을 확대하자고 해야 하는 판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바둑을 둘 경우 정식시합에서는 훈수를 둘 수 없지만, 동네바둑에서는 훈수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훈수를 받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악수를 두더라도 자기가 하겠다는 모습이 당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준상 발전노조위원장=대중투쟁과 대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조직해 득표율을 높이냐는 부분에 대해 진보정당은 (민중참여경선제를)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의 지지는 그들의 취미활동이나 생존구건 문제 모두가 관련돼 있다. (일전 민주노동당이 제기한)부유세(공약)의 경우 민중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슈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기름값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국립공원 입장시 사찰입장료까지 포함돼 있다. 당이 종교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일동 웃음) 민주노동당만이 사찰입장료 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계문제와 관련해 낚시가 대중화됐는데 섬 휴식년제가 없다. 운전면허증 취소제도가 있다. 이 건 잘못된 문제이다. 카드인하 수수료 운동, 비정규철폐운동, 한미에프티에이저지 운동 등이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냐 등의 여부와 함께 이슈선점을 위해 모험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해야 한다. 대중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안아야 한다. 진보진영이 이런 것을 받아 주창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적극 제기해야 한다.

>사회자=집행책임자들이 모였다. 이 분들이 결심하면 진보민중진영의 힘을 결집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요공간을 책임지는 분들이 모인 까닭에 책임성있는 발언이 나왔다. 여러 가지 방안과 제안이 나왔다.

<마무리발언>

>박석운=이준상 발전노조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 예전에 향토예비군제 폐지 등과 같은 과감한 공약들이 나왔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적으로 반향이 되고 이슈가 된 이유는 그런 공약을 낸 집단이 바로 제1야당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마이너리그에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런 점(자신이 처한 위치)을 착각하고 있다. 의제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고를 쳐야 한다. 메이저리그 반열에 올라야 한다. 그래서 집토끼론을 내놨다. 힘이 약할 때는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꺼번에 여러 개 벌이는 방식보다는 화력을 집중해 하나하나 돌파해야 한다. 지역과 부문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자.

사회자=이상 토론을 마친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